

#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 170 回

第 2 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2007年 11月 29日 (木) 午前 10時

## 議事日程

### 第170回 大田廣域市議會(第2次 定例会) 第2次 本會議

1. 시정질문의 건
  - 가. 송재용 의원
  - 나. 조신행 의원
  - 다. 오정섭 의원
  - 라. 김인식 의원
2.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휴회의 건

## 附議된 案件

- |   |     |
|---|-----|
| 1. 시정질문의 건                                | 2면  |
| 가. 송재용 의원(일괄질문)                           | 2면  |
| 나. 조신행 의원(일괄질문)                           | 7면  |
|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 14면 |
| · 보충질문(조신행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 23면 |
| 1. 시정질문의 건(계속)                            | 27면 |
| 다. 오정섭 의원(일문일답)                           | 27면 |
| 라.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 48면 |
|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교육감)                | 53면 |
| · 보충질문(김인식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 57면 |
| 2.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병배 의원외 11인 제출) | 57면 |
|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 59면 |
|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 59면 |
| 5.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 59면 |
| 6. 휴회의 건(의장제외)                            | 61면 |

(10시 01분 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2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으로 오전에 두 분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고 정회한 다음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두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송재용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오정섭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순으로 진행을 하고 질문방식은 송재용 의원님, 조신형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세 분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오정섭 의원님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제2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가급적 질문시간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정질문은 관례상 발언시간이 20분이 되면 타임벨이 두 번 울리고 이후 3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차단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에 임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은 의원님들의 질문에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시어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가. 송재용 의원(일괄질문)

(10시 04분)

○議長 金榮寬 그러면 먼저 송재용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송재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在容 議員 유성 제1선거구 송재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대전 건설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미래의 인재 양성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신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중앙정부의 일관성 없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원정책과 연이은 국

책사업 유치실패에 따른 대전광역시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 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의 참여정부는 선택과 집중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는 등 일관성 없고 무원칙적인 정책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 속에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은 정부지원을 자기 지역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 외 다른 지역에도 연구개발특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중에 있습니다.

이같은 연구개발특구 범위 확장 및 신설 논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미래성장동력을 잃게 하는 공멸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이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특구지정 및 개발에 따른 성과가 가시화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구개발특구를 확대 지정하는 것은 분산투자에 따른 개발효과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특구지정에 대한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투자되어 온 막대한 자금과 그동안 쌓아온 과학기술 노하우의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상당한 역효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임시회 때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철회촉구안을 채택하여 관련 부처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확대에 대한 외부의 압력과 정치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에 대응할 만한 특별한 논리나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오히려 일부에서는 대전광역시가 다른 지역에 특구지정 확대를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나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작금의 상황에서 대전광역시가 다음과 같은 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향후 지금과 같은 연구개발특구 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가 더 이상 거론되지 않도록 대전광역시와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간 대응논리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상정된 특구법 관련 개정안들이 올해 안에 통과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나 여전히 특구범위 확장에 관한 논의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와 공조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가 그동안 비판받아왔던 기술상용화 실적과 그에 따른 지역과급효과가 미흡하다는 점을 반박할 수 있는 대응논리 개발이 적극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대덕연구단지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통해 창출된 수많은 혁신기술과 그에 따른 국가적, 지역적 유무형의 과급효과를 적극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적극 홍보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한 장점들을 발굴하여 대응논리를 개발함으로써 그동안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향했던 외부의 불신을 종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을 금지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신설되어야 합니다.

대덕연구개발특구가 목적인 성과를 내기 전에는 대덕특구 외의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 신설개정안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충청권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특례조항 내용을 담은 개정법률안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충청권 주민 모두는 대전·충청권 의원들이 발의한 특구 추가지정 반대 개정 법률안을 이번 기회에 통과시키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하며, 이러한 노력을 촉발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대전주자들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집중적인 육성과 지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확인 받아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부의 압력과 정치적 논리 속에서 특구범위 확대와 추가지정이 지속적으로 논의된다면 우리 대전·충청권 역시 그에 상응한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 전략 중의 하나가 차기정부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변함없는 육성지원정책을 약속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로 있을 대통령선거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추가지정 반대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집중적인 육성 공약을 대전주자들로부터 이끌어내는 정치적 활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연구개발특구 확장 논의에 따른 대전광역시 차원의 대응논리 개발 등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11월 13일 산업자원부가 로봇랜드유치사업 예비사업자로 인천광역시와 경상남도 마산시를 결정함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사업에 이어 금번 로봇랜드유치사업마저 실패하게 됨으로써 150만 대전시민 모두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 주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의 근본적인 원인은 대전광역시의 유치전략과 사업계획 및 방향설정 등의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전광역시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유치전략 및 논리개발이 적극 필요합니다.

산업자원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연구기반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고객중심의 로봇랜드 및 테마파크 구축이라는 사업 목적 측면이 희석되었다.”라고 밝히고 있어 대전광역시의 유치전략 및 정보력 부재가 유치실패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번 로봇랜드 유치실패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대덕연구개발특구는 더 이상 국책사업유치를 위한 핵심전략이 될 수 없으며, 우리 시가 지닌 훌륭한 연구인프라 중 하나의 장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만일 대전광역시가 또다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연구개발 인프라만을 내세운 단일한 유치전략을 펼친다면 또 다른 실패를 겪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로봇랜드 유치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각각의 국책사업 특성에 맞는 지역의 장점과 우수성 등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차별화된 전략 마련으로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준비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둘째,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그에 따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전광역시가 밝히고 있는 연이은 국책사업 실패원인을 종합해 보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충청권 입지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차별, 석연치 않은 심사과정과 선정과정, 정치적 논리의 개입여부 등을 실패원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전광역시는 국책사업 유치실패 원인을 외부 환경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대전광역시가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사업 유치실패 이후 그에 따른 정확한 실패원인 분석과 정부 대응 등 사후처리 및 관리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로봇랜드 유치사업에서 똑같은 실패를 자초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사업 유치실패 후 정확한 실패원인을 분석하셨는지, 실패원인을 분석했다면 주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연이은 국책사업 유치실패의 정확한 원인을 점검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과정에 중요한 이정표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대전광역시는 미심쩍은 국책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명쾌한 해명을 받아내야 합니다.

지난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노선사업 유치지역 결정 후 유치과정에서 탈락한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건설교통부의 미심쩍은 심사과정과 선정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로봇랜드 역시 지자체들의 유치열기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최종 프리젠테이션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점, 최초 단수사업자 선정 원칙이 무시된 채 복수사업자가 선정된 점, 마산시의 사전낙점 의혹 등 산업자원부의 심사과정과 선정과정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금번 로봇랜드 심사 및 선정과정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해명을 받아냄으로써 금번 산업자원부의 심사와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분

명하고 정확하게 바로 잡아야 할 것이며, 미심쩍은 심사과정에 대한 시민의 궁금증을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풀어줘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치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무엇이었는데를 되돌아볼 수 있는 타산지석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국책사업 유치실패에 따른 대전광역시의 대책마련 등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들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부권IC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광역도로망 추진과 함께 유성IC와 서대전IC의 유출입 교통량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대전종합유통단지의 건설은 인구유입과 물류간선망 확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과 물류비 증가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인근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5만 8,000명의 인구수 용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은 서구와 유성구 일원을 비롯한 주변지역의 교통량을 큰 폭으로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동서로상의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이 완공되어 서남부권 도로망과 연결될 경우 인근의 내동, 가장동, 변동, 괴정동을 비롯한 태평동 일대의 지역주민 10여만 명과 서남부권 유동인구 20여만 명을 감안한다면 교통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남부권 개발사업과 대전종합유통단지 건설에 따른 교통혼잡 및 물류비 증가 문제들을 해소하고 교통량을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호남고속국도 유성IC와 서대전IC 중간지점에 동서축과 만나는 IC를 신설할 것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IC 신설에 따른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대전광역시의 정치적 논리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생각과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덕연구개발특구 활성화와 국책사업의 성공적 유치를 통해 우리 대전이 한국의 미래를 선도하는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송재용 의원 시정질문서

○議長 金榮寬 송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조신행 의원(일괄질문)

(10시 20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조신행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조신행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議員 대전광역시 서구출신 한나라당 조신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성호 시장님과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간육성을 위해 정진하시는 김진호 교육감님 그리고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가장 아름다운 5월의 노래는 화룻가에서 만들어진다는 독일의 시인 하이네의 명언을 인용하면서 대전의 미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하여 환경부문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은 공기의 질이 가장 좋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날로 증가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살기를 희망하는 시민의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대전은 자연과 환경이 더불어 사는 환경도시,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친환경도시 구축을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대전시의 폐기물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제시를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방안을 진솔한 마음으로 풀어놓고 논의함으로써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그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토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대하여 파워포인트를 통해 설명을 하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우리나라 및 대전시의 폐기물 자원순환정책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환경부에서는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에 따라서 그동안 단순매립이나 또한 소각되던 폐기물을 자원화 및 에너지 회수로 가는 그런 정책으로 변환하고 있고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폐기물정책의 변화를 보면 부서의 명칭을 청소행정과에서 자원순환과로 변경을 하고 또 쓰레기 수거 및 안전처리 중심에서 발생억제 및 자원순환이용이라는 것으로 중심을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전시 폐기물정책의 변화 중의 하나가 폐기물정책의 기본방향을 3단계 구조에서 2단계 구조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소각이나 매립, 안전처리 중심에서 재활용과 발생 억제로 가던 것을 2단계 구조로 해서 발생억제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과 재생이용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그동안의 비효율적 환경정책 집행사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우선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이 미흡합니다.

그동안 2002년도부터 본 의원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상당 부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추진을 해서 현재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준공이 나지 않았고 이것을 대전시에 이관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는 서남부지구 하수처리장 신설계획의 무산인데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용량이 부족하다면 충분히 건설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남부지구 내의 하수처리장 계획은 환경부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재심이 불허됐는데 이것 또한 대전시의 충분한 공급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계획했기 때문에 무산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수슬러지 처리방향의 문제인데요.

LFG발전시설 그러니까 메탄가스 포집을 통한 발전시설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유일하게 매립을 하게 됐는데요.

이 부분 또한 무리한 정책추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서남부지구 소각로 및 열병합발전소 신설인데요.

이것도 자원 및 에너지 회수보다는 손쉬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대전시 환경정책 로드맵은 대전광역시가 주변에 대덕R&D특구가 있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위치해 있으면서 교통도시 또 첨단과학도시, 문화관광도시, 국방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각종 오염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전광역시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과 인간이 더불어 사는 환경도시, 환경이 보전되는 지속가능도시를 지향해야 합니다.

대전시민의 환경인식을 그동안에 봤습니다.

첫 번째로 대전시민들은 환경개선사업을 선정할 때 감시와 참여기능을 강화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방안 설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이 되고 있는 매립, 소각보다는 에너지 회수 및 자원재활용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요자 중심의 환경정책 수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자 중심의 환경정책 집행이 아닌 수요자인 대전시민이 바라는 환경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환경정책 수행의 명확한 평가 및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단과 환경정책 집행 후에 개선사항에 대한 사전 또 사후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에 정책서포터즈 활용을 통한 사전, 사후의 평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의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대전시 인구가 2003년도에는 143만명에서 현재 148만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폐기물 발생이 하루에 2003년도에는 1,560톤 발생하던 것이 2006년에는 1,315톤으로 줄어들고 있고, 1인당 배출량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기물처리 또한 매립률은 52%에서 19%로 낮아지고 있고, 재활용률은 41%에서 61%로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각률도 6.2%에서 19.3%로 늘어나고 있는데, 재활용률의 경우에 2005년도에 61%로 올라간 것은 이때부터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했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지 특별한 재활용률이 높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은 매립장이 있고 또 소각장도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금고동 제1매립장 관리·운영 현황을 보면 제1매립장은 1996년부터 현재까지 약 1,540억원 정도를 들여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생활폐기물 하루 평균 351톤에서 현재 386톤으로 약간 증가추세가 있고,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에는 조금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립장 추가건설의 문제입니다.

대전시에서는 제2매립장 건설을 유성구 금고동 지역에 현재 2,640억원 정도를 들여서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토지보상을 약 90% 정도 마쳤고 지장물도 보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제2매립장 건설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과 또 일부 공무원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점을 보면 우선 지속적인 매립을 통한 환경오염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고 또 제1매립장을 충분히 연장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술을 검토하는 것을 회피하는 문제가 있고 또 환경부 자원순환사회구축 정책에 대해서 위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환경정책기조에 역행하는 문제 또 지방자치단체의 막대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또 대전시민의 친환경적인 도시만들기에 역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매립지 주변의 환경악화 이런 위험성도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시의 제1매립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제2매립장을 건설하지 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1매립장을 생활폐기물 종합처리 및 재활용단지로 조성해야 됩니다.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 등 유기성 폐기물의 통합적 처리 및 재활용통합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제1매립장 수명연장 및 순환형 매립장 개념을 도입해야 합니다.

생활쓰레기 전처리를 통해서 매립량 감소 및 환경부하 저감으로 매립장 수명을 연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매립장의 자연순환 이미지 부각을 이뤄야 되는데 매립장을 최종처분을 위한 공간보다는 폐자원순환의 새로운 공간으로 이미지를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생활쓰레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통해 영원히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재활용을 통하여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대전시 생활폐기물 정책 및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전처리시설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에서 생활폐기물 처리를 지금까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중에 매립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물질을 매립함으로 인해서 폐자원의 낭비 및 매립지 수명이 저감되고 있고 또 폐기물의 매립 시 악취, 매립가스 및 침출수 배출로 주변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유엔정부간기후변화위원회에서는 하수슬러지 매립을 불허한다는 계획이 통과됐는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하수슬러지를 매립한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대단히 걱정스러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소각의 경우에도 에너지 회수 및 재활용률을 상당히 저하시키는 부분이고, 발열량의 증가로 소각량 감소 및 비효율적인 관리가 있습니다.

재활용 부분도 아직까지는 재활용 인프라의 부족으로 재활용의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MBT시설을 도입해야 하는데요, MBT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MBT라는 것은 폐기물을 기계적이고 생물학적인 처리를 통해서 쓰레기를 매립이나 소각하기 전에 재처리를 해서 자원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립이든지 또는 소각량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선진기술시스템인데요.

다시 말하면 각 가정이나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분리수거해서 그후에 남은 쓰레기를 다시 한 번 재처리를 해서 30% 정도만 매립이나 소각을 하는 아주 획기적인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BT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국가의 환경정책에 따라 대전시를 미래지향적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하는데 필요하고 또 제2매립지 건설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제2매립장 건설의 대안이 될 수가 있고, 매립장 주변 주거환경 악화 및 주민민원 발생을 억제할 수가 있고 또 단순소각 및 매립으로 폐자원 낭비 및 매립량 증가 및 지구온난화 가스 등 환경오염 부가 증가를 막을 수가 있고 또 기존 처리방식에서 탈피해서 Clean City 이미지를 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처리시스템인 MBT시스템을 도입할 필요

가 있습니다.

그동안 MBT라고 하는 전처리시스템 검토 추진현황을 보면 환경부에서 폐기물의 재활용 및 에너지 회수 극대화 또 매립지 수명연장 등 환경문제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그동안 2005년부터 검토해서 현재 수도권 매립지 사업선정을 하는 단계까지 상당히 진보가 돼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회에서도 생활폐기물 자원순환형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 매립장의 효율적 운영 및 제2매립장 건설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6년부터 MBT에 대한 연구를 본 의원뿐만 아니라 이것을 동의하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현재까지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상당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환경부에서 그 MBT 도입의 타당성 용역의 결과인데요.

스토커식이나 열분해용융 방식은 이것은 소각처리방식입니다.

이 소각처리방식과 MBT 처리시설을 비교해보니까 시설비 부분에서나 또 처리단가의 부분에서도 MBT시설이 상당히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T 국내도입 평가 결과는 전처리시설이 소각처리방식보다 시설비 및 처리단가 측면에서 저렴하고 또 자원순환정책 추진에 가장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스템 확대 실시한 내용을 보면 행복도시의 경우에서도 폐기물처리를 하는 우선순위를 발생억제 및 감량에서 적정한 처리 순으로 우선순위를 잡아서 전처리시스템을 약 260톤을 하루에 처리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추진한 경제성 확보한 부분을 보면 시설투자비 절감부분인데요.

시설투자비만 해도 소각로에 비해서 MBT시설이 상당히 저렴한데, 소각로의 경우에는 국비가 약 30% 지원이 되고 MBT시설은 50%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소각로의 경우에는 지방재정이 840억원 들어가는데 MBT시설은 300억원 정도 들어가서 상당히 절감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운영비 부분에서도 소각로나 MBT가 비교해 보면 MBT시설이 상당히 약 1,000억 원 정도 처리비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약 11년 정도 연장하는 효과를 가져다 준다고 해서 약 1,800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MBT시설을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약 5,000억원 정도의 실제 비용절감효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독일 등 유럽에서는 「폐기물매립법」을 제정해서 전처리를 하지 않고는 매립을 하지 못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고, 이미 유럽에서는 전처리시스템, MBT시설의 어떤 문제점이 없음을 이미 증명을 했었고, 쓰레기라는 것은 쓰레기 성상에 따라서 기계화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성상을 맞추는 기계처리방식이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도 여러 가지 기술이 진보가 됐고 또 기술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F사, K사, B사, G사에서 각각의 지역별로 전처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MBT 도입을 할 때 기대효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제적, 산업적 기대효과입니다.

우선 금고동 매립장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제2매립장 건설, 운영비 및 사후관리비를 예산절감을 할 수가 있고 또 재활용 환경관련산업이 활성화될 수가 있고, 청정개발체제라고 하는 CDM사업과 연계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톤당 약 20유로 정도 지원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환경적인 기대적인 효과입니다.

우선 매립장 주변지역 환경개선이 될 수가 있고 또 세계 환경보호정책에 일조할 수가 있고 또 사회적인 기대효과로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 및 지역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세계적 환경 및 자원순환형 도시 이미지로 부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MBT시설을 할 경우에는 과연 수명은 얼마나 연장이 되고 또 경제적인 효과는 얼마나 있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매립장을 MBT시설을 설치할 때 연장효과입니다.

우선 MBT시설을 하더라도 부속토는 어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속토를 전량 매립한다 하더라도 약 22년 정도가 사용연장이 되는데, 현재 6년 정도 남아 있는데 그것의 한 3.64배 정도가 연장이 되고 또 부속토를 일부는 재활용할 경우에는 약 6.77배인 약 42년 정도가 연장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내용은 현재 매립장 잔여사용기간이 6.2년인데요, 22년 정도 연장할 경우에는 1년에 100억원씩 해서 2,200억원 정도가 절감이 되고 또 42년이 연장되면 4,200억원 정도를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MBT 도입 시 건설 및 운영비 부분에서도 단순히 건설비용만 비교하더라도 매립장 건설비용 대 MBT시설 건설비용이 약 1,500억원에서 1,800억원 정도의 비용 절감이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MBT시설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결론 및 대안제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제1매립장 사용기한을 최대한 연장해서 예산을 절감해야 됩니다.

제2매립장 조성은 포기하고 타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제1매립장 여유부지를 활용한 자원순환단지 조성도 필요한데요, 현재 제1매립장에 건설폐기물처리장 예정부지였던 2만여 평의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현재 관리동 부지로 이용하고 있고 관리사무소

부지를 활용방안도 있겠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전시의 MBT 도입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선진환경정책 추진의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MBT시설 적용을 위한 전문가 등 자문위원을 구성해야 되겠고 또 대전시에서 MBT시설 설치를 위한 환경부 및 지방예산 확보의 노력도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대전시 MBT시설 도입을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되고, 대전시 및 시의회 및 시민들의 자원순환사회 구축 네트워크 구성을 해서 감시와 협력 역할도 확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전시 환경정책 로드맵을 수립해서 즉각적인 실시를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금까지 환경부가 추진중인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적용함으로써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검토를 통하여 미래 친환경도시 대전을 구축하기 위해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유, 목재, 석탄, 철광석 등 에너지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생산과정 공정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것은 물론 최종처리단계의 쓰레기도 철저히 분류하여 자원으로 다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살펴보면 분리수거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가연성 폐기물을 비롯한 자원으로써의 이용가치가 충분한 폐기물이 땅속에 그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환경의 파괴와 이용가능한 자원의 손실은 물론 매립장의 가용기간을 현저히 단축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전시의 폐기물처리정책은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고, 관계부서에서는 시급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타시·도에 뒤따라가기에 급급하여 연간 100억원 정도의 손실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 제2매립장부지 매입으로 인한 예산의 사장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선진환경모범도시를 다음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폐기물정책 로드맵을 정립해야 하고 예산절감과 환경보전을 위해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폐기물정책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시장께서는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서는 남들이 다하고 나면 우리도 한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아닌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미래는 결코 쉽지 않은 현재 당면한 우리들의 과제를 풀어야만 보장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질문을 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우리 사회를 보다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참조)

· 조신행 의원 시정질문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

○議長 金榮寬 조신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잠시 후에 듣도록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議長 金榮寬 그러면 송재용 의원님과 조신행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송재용 의원님과 조신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금년 들어 마지막 하는 정례회를 맞아서 많은 소감과 느낌이 있어서 한말씀 먼저 올리하고자 합니다.

금년 1년 동안 정말로 시 의원님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서 이제 마무리하는 달에 와 있습니다.

나름대로 시에서도 행정 행태를 바꾸고 행정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시정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관심 썼던 사업들이 마음대로 또 의도된 대로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시민과 많은 분들이 안타까움을 갖게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시정 책임자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래도 경부고속철도 주변정비 사업의 확정과 아울러서 그 사업시행 방법을 시설

공단이 총책으로 주관하던 사업을 대전시에 위탁받아서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 점도 기억이 나고 또 특히 도시철도 1호선이 완전 개통이 돼서 차질없이 시민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다는 성과도 같이 누리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의 가장 어려운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서 대덕R&D특구 내에 1, 2단계별로 개발이 구상되었던 것을 토개공, 과학기술부와 합의해서 동시에 개발하도록 협약한 일도 보람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시가 창설한 WTA가 세계적으로 확장이 돼서 유네스코와의 협력사업에 결실을 맺어가는 일도 보람있는 일이라고 느껴지고 특히, 스마트시티 내에 호텔 건립 사업과 관련돼서 외자유치가 이루어진 일도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아울러서 나무심기운동 또 어려운 이웃에 희망을 주는 무지개프로젝트, 신탄진 지역에 새로운 주거환경개선과 산업입지를 위한 신탄진프로젝트 또 인근 시·군과의 공동협력을 통한 윈윈하는 소위 G9프로젝트 또 충청권경제협의를체를 구성하는 일 등 또 크고 작은 일과 수상한 사안들도 좋은 기억으로 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 또한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될 내용들을 질문하셨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우선 송재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재용 의원님께서서는 특구지정된 것과 관련돼서 일부 시·도에서 ‘특구를 추가지정하자.’ 하는 논의에 대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용어를 구분해서 쓰고 싶습니다.

특구 범위의 확장과 추가지정은 다른 차원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등”자가 들어가는 사유가 있습니다.

당초 법률이 제정될 때 다른 시·도에서 똑같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라고 지정하는 단위를 딱 설정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정치적으로 흡수해서 거기에 “등”자 하나를 넣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 빌미를 가지고 대구, 광주 등이 움직임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대전 대덕 R&D특구의 범위를 키우자는 이야기였지 지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연관도 없는 다른 도시에 “특구를 추가지정 하자.”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곡해를 해서 ‘그것이 다른 시·도에 빌미를 줬다,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R&D특구의 기본 목적은 연구성과의 사업화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

기 때문에 어떤 부지의 확보문제가 내재적으로 중요한 사안입니다.

특구의 경계선에 가보시면 특구가 가지고 있는 자연 형상을 보실 수가 있고 또 특구경계선 끝에 충남 쪽에 이어진 땅의 형상들을 아마 의원님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저희로서는 토지 값이 좀 낮고 확보가 용이한, 지리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연계성을 갖는 그런 범위 내에서 대덕R&D특구의 토지의 면적을 좀 넓히자 하는 것이 본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들어오면 결국은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연구원과 교류를 하고 거기에 사는 종사원들은 우리 지역에 사시고 또 쇼핑이나 문화활동, 교육 등도 우리 지역에서 커버해 낼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의견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은 아직도 소신적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특구 추가지정과 우리 지역의 특구범위 확대를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논리 때문에 국회에서 네 가지 안들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구에서 서상기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 100만 이상 내륙거점도시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자 하는 안이 하나 있었고 또 권경석 의원 등이 포함이 된 일부 의원들은 3개 도시 이상이 연접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 연담 광역도시를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만들자 하는 의견을 내고 있고 심재엽 의원 등 몇 분은 대특구는 연구개발산업화 촉진지역으로 소특구는 과학단지지정지역 또는 인근 지역으로,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께서 자기 지역의 이익과 연관해서 각각 사전인수격으로 의원발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걱정이 돼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와 관련된 전 의원들을 찾아가서 그 부당성을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류근찬 의원께서는 ‘대덕특구가 목적인 성과를 내기 이전에는 별도 특구지정을 금지하자.’ 하는 안을 또 내셨습니다.

이게 특구와 관련된 사항들이 정치적 시기와 맞물려서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들께서 해당 지역에 대한 애향심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정치적 의도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 사안에서 몇 가지 의안들이 국회에 상정중인데 상임위에 계류중으로 정기회 폐회가 되면 자동 폐기할 전망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시의 논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특구와 관련된 법으로 지정해서 2년이 경과한 지금 시점에도 당초 계획된 대로 정부투자는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6,61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하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2년 동안 된 것은 850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그러면 반 정도도 못 온 그런 상태로 인식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희가 진정하게 연구성과나 인프라가 있는 데서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논리를 계속해서 관계 부서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들을 대선과 관련해서 확실한 담보를 받자는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 주시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이런 것들이 아주 확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또 정부에 대해서 항변하고 있는 것은 이런 법적인 장치가 마련이 됐고 따라서 국세와 지방세의 감면조치가 있고 일정한 펀드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시스템도 있고 또 각종 개발할 때 부담금과 공과금을 처리해 주고 우리 시에서도 출선해서 물값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내려줬지 않습니까, 전기료를 내린 것과 맞춰서.

그래서 많은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그저 그런 상태로만 돼서는 연구성과의 산업화라는 큰 뜻을 목표된 기간 내에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 저희들 걱정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국책사업을 우리 대덕R&D 특구와 연관된 대전 지역에 밀어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주장하고 발표하는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기부상열차든 로봇랜드 등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중요한 국책사업 유치에 노력을 해왔고 그런 취지를 최고의 층을 비롯해서 각계 요로에 다 건의를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면 특구육성에 대한 정부 의지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예산을 지원할 형상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것과 관련된 국책사업의 연계적인 활동을 통한 특구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는 측면에 국책사업지원이 없다는 측면을 봐서라도 그저 법만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쪽으로 저희가 소위 불만을 토로하고 건의를 한 적도 한두 차례가 아닙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책사업의 실패와 관련된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실패한 사람이 말을 하는 것은 또 적절치 않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실패한 데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으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부상열차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4개 시·도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 다 열심히들 했고 저희도 의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노선을 선정하고 연관된 투자범위도 지원하고 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최종 결과를 보면 건설교통부가 직할하고 있는 공항공단에 그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와 공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바에야 뭐하러 시·도 공모를 하는가?

건설교통부 사업으로 해서 그냥 공항공단이라고 하는 100% 투자 계획해서 그냥 주고 실천을 해보지 왜 공모라는 엉뚱한 과정을 거쳐서 시·도별로 에너지와 정력을 낭비하게 하고 상실감을 주는가 하는 것들이 지적이 돼 있었습니다.

물론 ‘네가 공부를 잘 하고 열심히 했으면 잘 될 것이 아니냐?’ 하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과 경위를 보면서 저희와 같이 선정이 안 된 도시의 느낌들은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상업화를 위한 시범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건을 다는데 아시는 것처럼 상해의 푸둥공항에 그것이 깔려 있습니다.

그런 것들과 연관해서 건설교통부가 인천 공항공단과 연관된 부분에 그것을 결정한 것으로 저희는 추정을 합니다.

따라서 추후에 관심있는 부분은 그것과 관련된 노선은 노선이지만 이제는 그 산업을 어떻게 우리 지역에 있는 기계연구원 등등과 연관해서 산업을 한번 유치해 보는 노력을 추가로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로템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있고 여기는 성능을 실험하거나 연구하는 기능이 있고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볼 요량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노선이 설정됐다가 안 되니까 그 부분에 기대를 걸었던 주변의 시민들에게도 우선 죄송하지요.

기대했던 노선이 들어오면 편리성이 강구될 텐데 그렇지 못해 무산한 점이 아울러서 주민들에게 상실감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책사업에 대한 실패, 원인과 대책이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십니까만, 저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또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서 어떤 사업이든지 저희가 제안을 합니다.

어떤 분들도 말씀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끊임없이 열심히 했다고 저는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로봇랜드와 관련해서는 정말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습니다.

송재용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다 해주셨는데,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정하는 것은 발표하는 날 경남지사가 “로봇랜드가 마산에 흔쾌히 결정되게 된 데는 노무현 대통령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 라고 멘트한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추정한 것은 이 부분이 정치적 고려가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의혹을 갖게 됐지요.

두 번째 의혹은, 지적하신 대로 7월 말까지 제안서를 다 접수해 놓고 8월 말에 확정하기로 계획된 사무입니다.

자치단체가 10군데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판정이 어려워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없이 10월로 갔다가 11월로 갔다가, 확정시기가 연기된 점,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심사결정 시기가 연기된 점도 의혹을 갖기에 충분하다.

혹시 최근에 이루어지는 ‘대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당초는 하나라고 계획된 것이 두 개로 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마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동향으로 전해들은 바에 의하면 ‘최종결정을 하기 전에 점수 차이가 2.5% 포인트 차이면 복수로 선정한다.’ 하는 것을 합의하고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니 마침 인천과 마산의 점수 차는 2.5% 포인트 차이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세 가지 점에서 볼 때 선정의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또 하나의 변명은 특구에 대한 육성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국책 사업도 관심이 없어하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특구성장 의지가 있는가 하는 점을 되묻고 싶고, 두 번째 모처럼 대전, 충남·북이 합해서 대전, 충남·북 모두의 뜻으로 대전에 로봇랜드 유치로 건의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인정되지 않았습시다.

세 번째는 지역의 지능화 로봇사업센터라는 것이 산업자원부 사업으로 해서 이미 진행됐고 완성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가지고 있는 인프라조차도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측면에서 선정과정에 저희가 불만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참으로 애써 주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떠 두르고 애써 주셨고 서명해 주신 분도 있고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기꺼이 로봇들을 다 출연시켜서 명예시민로봇증도 수여를 하고 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봇랜드가 안 됐다고 해서 우리 지역의 로봇산업을 육성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ADD든, 원자력연구원이든 ETRI든 많은 연구소들이, KAIST 등 그런 기능들을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지속적인 지역의 핵심 육성사업으로 봐서 지원을 해가고 키워나가야 될 사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사실 크게 말씀드리면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핵심 답안을 못 썼다고 하는 지적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들은 저간의 사정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저희들도 시든 의회든 또 정치권이 힘을 같이 합해서 어떤 정치적인 역량도 키워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교훈도 또한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걱정해 주신 것은 앞으로는 이런 얘기 안 하도록 우리가 첨단의료복합 단지를 만들어갈 때도 이런 사안들을 고려해서 실무적인 기획사무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역량까지 같이 보태서 지역에 국책사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더 노력을 하고 구심점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합해 주시면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서남부권 IC 신설 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을 주셨습니다.

지금 꼭 설명하신 것처럼 서남부권 개발과 관련돼서 교통량 증가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시는 어느 도시보다도 고속도로와 연관된 인프라가 잘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를 고속도로가 소위 링웨이처럼 동그랗게 둘러쌓여 있고 IC가 여덟 개이고 정선(junction)이 네 개입니다.

이런 도시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우리 도시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서남부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03년 11월에 건설교통부와 관련돼서 서남부광역교통대책 최종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해서 9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룡로 우회도로, 동서로 연장, 동서로, 북부유통단지 진입로, 계백로 우회도로, 노은~동서로 간 도로, 계백로 확장 이렇게 해서 9개 노선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북부유통단지 진입로 이것만 공정을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설계단계나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무이고요.

염려해 주신 IC 건은 저희도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점에 공정을 하고, 하지만 실무적으로 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유성톨게이트가 고속도로 본선에서 150m밖에 안 떨어져서 차량 지체로 유성IC를 이전하는 문제가 제기된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IC설치 간격은 평균 10km로 IC설치 시에 지역간, 상권, 영업소 통과 차량의 지체, 소요경비, 이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등을 종합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와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종합해서 판단을 해서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신행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이라기보다도 저희들한테 교육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지속 가능한 사회, 환경에 대한 경쟁력 있는 대전 이런 부분을 걱정해 주셔서 귀한 지적과 정보를 제공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도 전문적인 부분까지 다 섭렵하셔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람에 따라가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귀담아 들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저희 업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점에 감사드리고 서두에 지적하면서 몇 가지 저희 환경 행정에 대한 지적을 주셨는데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의 처리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측면에서 지금 도시공사하고 한화하고 문제가 있는 점 잘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현재 협의를 밀도있게 진행중입니다.

물론 지적된 사안은 잘못된 사안입니다.

또 서남부지구 하수처리장 신설 계획도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계획이 반영되지 못하고 무산이 됐습니다.

또 하수슬러지 처리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는 2011년까지는 해양투기가 가능하고 그후부터 금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남부지구 소각로하고 열병합발전소 신설 건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는 전량을 에너지화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한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점적으로 말씀을 주신 MBT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조신형 의원님의 이해를 위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MBT는 생활폐기물의 자원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중에 가연성 물질을 분리 가공해서 고형 연료를 생산하는 폐기물 전처리 시설입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처리 여건은 광역위생 매립장이 확보되어 있고 소각시설 운영으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돼서 신기술 도입에 있어서 환경부에서는 시범사업 중인 타시·도의 선형적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검증이 되면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환경부의 입장입니다.

또 폐기물전처리 시설 필요성은 분명히 인식합니다.

매립지의 잔여 용량이 향후 7년으로 예상되어서 매립량 감소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 배출에 따라서 폐기물의 발열량 증가로 소각시설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것도 사실입니다.

폐기물 감량에 대한 다양한 시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감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공감을 합니다.

국내 MBT 시설은 지적하신 것처럼 원주와 남해군이 민자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

고 있고, 시범사업으로 수도권과 부천시, 강릉시, 부안시 등이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MBT 시설의 도입에 대한 우리 시는 조신행 의원님께서서는 너무 많이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만, MBT 시설은 소각 시설 대안으로 설치하는 시설로 중소도시 등 소규모 지역에 필요하면서 경제성이 우월하다고 하지만 아직은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관계로 환경부 시범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지적하신 대로 많은 장점과 다른 사례도 거울 삼아서 이 부분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한편, 여기 부산을 보니까 부산도 지금 지적하셨지만, 저도 궁금증이 있습니다.

왜 부산은 하는데 우리는 시작을 안 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알아보니까 부산은 위치가 바닷가라 발전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연관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부산의 소각로 시설은 저희보다 아마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관계가 맞아서 부산은 민자를 제안해서 금년 11월달에 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저희가 보가면서 저희도 지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상황을 도입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에 의하면 2010년 정도에 대전시에 예산을 줄 계획으로 있는데 내년부터 더 노력해서 당겨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 전문가 구성 자문위원회 관계는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2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MBT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는 200평당 한 550억원 정도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됩니다.

사업비 30%는 국고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지만 환경부에서 국비이전이 가능한 2010년 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좀더 긴밀한 협의를 하고 MBT시설들이 물론 장점들이 확인이 되면 서둘러서 우리 지역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정부 협력사항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의회, 시민들이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성 감시와 협력 역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런 역할이 없이는 환경정책과 또 재활용 정책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참여를 하고 유관된 기관, 부서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일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의 자원순환의 기본방향은 폐기물의 발생억제와 재활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매립과 소각 등 처리는 예외로 하면서 폐기물 발생 제로화의 자원순환사회를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MBT시설에 대한 문제라든지 유관된 기관과 어떤 네트워킹을 해서 공동참여를 통해서 성과가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문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가 있군요.

하나를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1매립장 사용 기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제1매립장은 2007년 10월 말 현재 한 65%가 매립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1매립장 부지는 대부분 폐기물 관련 부대시설이 위치하고 있어서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하면 여유부지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매립 종료 후에는 20년간 사후 관리 기간으로 시설물 설치가 어려운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특히 지금 현재 25톤 규모로 되어 있는 음식물 자원화 시설이 노후돼서 폐쇄되는 부지는 3,300㎡로 환경부에서 권장하는 공공처리시설 100톤짜리를 실시할 예정부지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매립장 부지가 여유가 넉넉하지 않은 점을 말씀드리고, 또 제1매립장 재처리 문제로 수명연장 건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더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모색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MBT사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제2매립장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하는 것이 지금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내용들을 더 파악을 하고 해서 조신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킴삼아 보면서 우리 시에 있는 자원정책, 환경정책에 크게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 질문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재용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宋在容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조신형 의원님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예.)

말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 1. 보충질문(조신형 의원)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趙信衡 議員 조신형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질문에 대한 개괄적인 답변이 있었지만 사실 본 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지식을 아직까지 시장께서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답변 자체도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몇 가지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물론 있습니다.

제1매립장이 있고 제2매립장이 있는데 우리가 미래의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서 매립장이 있다고 해서 과연 매립만 능사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량의 한계가 있다는 말씀만 있고 대안은 아직 없고 환경부에서 2010년 정도에는 지원을 해서 MBT 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원찮은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제1매립장에 여유부지가 없다는 말씀하셨는데 제1매립장 여유부지가 있습니다.

제1매립장에서 현재 사용하는 부지 대비 전체적으로 지정 고시된 면적을 보면 개발 제한구역을 좀더 훼손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 개발제한구역은 우리가 개발부담금을 내고 이것은 활용하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건설폐기물처리장을 이전하려고 남겨놓았던 2만평 부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MBT를 제2매립장을 활용하면 된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것이야말로 문제 있는 답변입니다.

우리 시장께서는 연간 100억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되고 또 현재의 매립장을 20년 내지 40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도 그것을 포기하고 제2매립장에 MBT시설을 설치하면 된다고 하는 아주 웅색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시장으로서 또는 관계 공무원이 어떠한 자료를 쫓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시민의 혈세를 연간 100억원씩 낭비하는 이런 정책 집행이 있을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매립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는 않으셨는데 제2매립장은 본 의원은 근본적으로 쓰레기매립장으로 지금 고시를 하긴 했습니다만 제2매립장은 제1매립장이 연장이 된다면 20년 내지 40년 뒤의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토지를 보상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일이겠습니까만 다른 용도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800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마무리하는데 이 800억원의 예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라든지 다른 기본 인프라 시설하는 비용으로 활용해야지 몇십 년간 이것을 땅값으로 묶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고시해 놓은 것은 절대 변경하지 못 한다는 그런 의견이 집행기관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 동의 를 받아 변경이 가능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도 사업고시 5년 이후에는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남부권 소각로 문제였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우리 대전시에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남부권에 다시 하수종말처리장을 건립한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안 된다고 해서 반려가 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남부권에 소각로 설치의 문제입니다.

소각로 설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택지 등을 개발하는 데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하면 어떤 지역에서 폐기물이 발생한다면 그 지역에 폐기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도록 법으로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그 시설을 그 지역에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오는 전반적인 용량이 부족할 때 건설하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그 지역에 충분한 용량이 있다면 그것은 돈으로, 그러니까 금액으로 내서 그것을 대신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남부권에 소각로를 건설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비용을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다 충분히 검증이 된 내용입니다.

시장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들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전 시민의 혈세가 1년에 100억원 정도 절감되는 방안이 있다면 즉시 시행을 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1년 늦추면 1년 정도 우리가 손해 보는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서 시장께서 대전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판단하시기 바라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조신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

박성호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준비하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의석에서 - 준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식사 후 2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속개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조신형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호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오전에 조신형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신형 의원님께서 너무 전문적으로 많이 이해를 하시고 계셔서 바로 충분하게 답변드리지 못 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 의도하시는 내용이 우리 지역의 환경, 쓰레기 문제를 좀더 합리적으로 처리 하기 위해서 MBT시스템을 서둘러서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것이 총체적인 의견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소 시기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것처럼 MBT시스템이 환경부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시범사업지구가 되지 못한 이유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건 때문에 환경부에서 저희들을 맨 먼저 시범사업지구로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환경부 선정기준입니다만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여유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은 다른 지역보다 급하지 않다 하는 점이 하나 있고 또 그 MBT사업을 해서 고형물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우리 지역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그것을 태울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시기로 봐서 2009년 내지 2010년에 확장사업을 할 때 대전시를 고려하겠다는 의견도 실무적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르면 내년부터라도 이런 MBT사업과 관련된 업무추진 체계를 선점해서 지금의 상황이나 또 MBT시스템의 검증이 시범사업지구로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증결과라든지 사업시기와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무적으로 준비해서 나름대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서둘러서 우리 지역도 검증이 완료되면 그런 것을 서둘러 도입하겠다 하는 총체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중에 매립장의 사용기간에 대한 문제라든지 또 그린벨트를 훼손하더라도 거기에 설치 위치를 잡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 또 제2매립장에 대한 타용도 전환 문제, 그 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그릴벨트와 관련된 지역에서 어떤 부분을 전환하려면 훼손부담금이 적지 않게 드는 문제가 하나 있고 또 그린벨트를 정리했다고 할지라도 시설물이 적습니다, 그런 문제가 한 20% 정도밖에 안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 매립장에 대한 전처리라든지 재처리 이런 비용도 비용과 그리고 효과를 한번 검토해서 봐야 될 종합적인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전향적이고 또 능률적이고 우리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확실한 지를 한번 더 짚어서, 포함해서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또 제2매립장에 대해서는 물론 거기에 따라서 제1매립장의 어떤 사용시간, 기간 또 지금 제기하시는 MBT 시설에 대해서 거기 비했을 때의 또 종합적인 절감이라든지 부지절감 효과,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나서 아무 문제가 없다면 다른 용도의 사용도 포함해서 검토를 하는 것이 행정의 순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사안이나 또 지적이 아니더라도 제시하신 사안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업무를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신형 의원님께서도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趙信衡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

## 1. 시정질문의 건(계속)

### 다. 오정섭 의원(일문일답)

(14시 07분)

○議長 金榮寬 다음은 오정섭 의원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호 시장께서는 보조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대전 서구 출신 오정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선 4기가 출범한 지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반에 대해 시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행복한 대전의 미래를 착실하게 준비해 온 열정의 시간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본 의원은 이에 쉽게 동의할 수 없

는 상황입니다.

임기 4년 중 1년 반은 대전시정의 초석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습니다만 대전시민들은 대전시정에 뭔가 허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크게 걱정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청사 밖으로 한 발자국만 나가면 대전시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대전시민의 싸늘한 시선을 감지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거창하고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일상적인 있는 그대로의 대전민심을 전달하고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민선 4기 대전시정의 방향 그리고 시정 스타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습니다.

과거 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등을 거친 행정의 달인이라는 긍정의 평가도 있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도 과거 행정관료의 틀을 벗어나지 못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혹평도 있습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행정의 달인이라는 자만 속에 독선으로 흐르는 것은 아닌지, 조직 내 연로가 차단돼서 행정조정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러한 소리가 곳곳에서 퍼져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에 대한 일방적인 공격의 소리가 아니냐고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많은 시민의 소리라 생각하시고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바로 답변드립니다?

○吳丁燮 議員 예.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자료에는 없는 점을 물으셔서 한편 당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적하신 내용이 행정사무나 시책 계획에 대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느끼는 대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섭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사물은 다 달리 보입니다.

정치적 사안도 여당과 야당은 반대로 봅니다.

시정은 집행기관과 의회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지혜를 맞대고 끌고 가는 일이 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1년 반 동안 우리 의회와 집행기관이 나름대로는 놀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해왔다고 저희는 자부를 합니다.

그 과정에 의회의 협조가 크게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을 합니다.

서두에 밝힌 대로 몇 가지 사업들을 간략히 나열했지만 나름대로 정리해서 다시 보고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정의 방향과 스타일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제가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원천적인 생리가 행정가라는 것은 숨김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시장은 행정가가 되지 말아야 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행정가적인 기본 틀을 가지고 있어야 시의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단지 구호나 대외적인 홍보나 정치력과의 어떤 면면을 넓히는 일에만 치우치는 정치가가 된다면 시의 실질적인 살림은 어떻게 될까 하고 고민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시의 한동안 고급간부로 재직을 하면서 그런 사례를 몇 가지는 봐왔다는 것도 제 경험입니다.

따라서 관료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에는 행정적인 부분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좀더 포괄적인 정치적 역량을 가미하라는 좋은 충고로 접수를 합니다.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저희 집행기관 간부들에게 요즘에 자치단체 행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와 홍보와 평가라는 3대 요소라는 것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제가 행정을 시청 내에서 오래 해왔고 나름대로는 가장 많이 안다는 평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 큰 일에 대한 소위 지도나 주문이나 업무지시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시 간부구조를 보면 아시는 것처럼 관리실장과 부시장이 최근에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바뀌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시의 핵심 수뇌부 자체가 시정을 흡수하고 이해하고 안착할 수 있는 시간은 필요한 것입니다.

저희는 금년 말이 지나면 나름대로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는 저도 오정섭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더 대외적인 일 또 큰 일, 바깥의 여론 이런 데에 이제는 눈을 돌려서 업무에 방향을 새롭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입니다.

언로의 문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일부 어떤 분들은 저에게 말하기가 어렵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제 표정이 아니면 제 말하는 투가 그런 점이 있어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변명처럼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부족한 면을 그래도 상당히 많은 양으로 지적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서 이제 새로운 업무 스타일로 바꾸어 가는데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본 의원도 1년 반이 지났기 때문에 남은 2년 반을 위해서 지금의 성적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선시장의 힘이라는 것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힘은, 시민의 결집은 지도자의 지도력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사실 이러한 지도력 때문에 대전의 국책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시  
중의 여론입니다.

과연 국책사업 유치를 위해서 시장은 얼마만큼의 정열을 쏟았는지, 조직력과 리  
더십은 발휘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시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뽑았습니다.

또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선거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저희들이 시민의 뜻에 따르는 것은 마땅한 도리입니다.

일부 의견에 따라서 국책사업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오전에 이미 다소 말씀을 드  
렸습니다.

지역적 역량을 모아서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것, 그 선두에 시장이 서야된다는 당  
연한 논리입니다.

저희가 나름대로는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지역 국회의원께도 협력을 구하고 실무  
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구하고 나름대로는 성실한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그렇게 된 마당에 그동안의 성실한 노력이 무슨 빛을 발하겠는  
가하는 점에서 지적하신 말씀 같습니다.

또한 특별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가 한나라당  
출신으로 해서 시장에 당선됐습니다.

그렇지만 과거의 상황과 작금의 상황이 사뭇 다르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  
지 않아도 여기 계신 시의원님께서는 저보다 더 정확히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많은 구성요소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전달하거나 하는 과  
정에서 나름대로는 왜곡되거나 잘못된 비판 지향적인 입장으로 흐를 수 있는 상황  
이 아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저희가 행정업무를 하면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하  
고 더 정확하게 챙기고 또 조정력도 발휘하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만 저희 시가  
행정을 할 때 지역 국회의원이 여섯 분입니다.

초기에는 전부다 열린우리당 출신 국회의원 여섯 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뀌어서 이제 네 분하고 두 분으로 당이 구분되어 있고 저와 같은 당  
을 가지고 있는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런 차제에 나름대로는 가지고 있는 인맥과 행정력을 동원해서 국책사업을 위해  
서 애를 썼습니다.

로봇랜드나 자기부상열차와 관련된 지적에 대해서 오전에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  
서 나름대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은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것도 정치권과의 어떤 교합하는 정치력을 키워줘야 된다는 지적에 동의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시의회도 같이 힘을 합해서 보태주시기를 계체에 간곡히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吳丁燮 議員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라는 또 다른 국책사업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사실 국책 사업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논리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노무현 정권 임기 말의 이 정권에서 그러한 국책사업들이 과연 논리적으로 결정됐겠느냐, 그것은 이미 예상된 일입니다.

그렇다면 대전에서 좀더 정치권과 정권적 차원에서 결정짓는 것에 대한 때로는 시장의 강한 논리도 필요했고 시장의 투쟁력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까운 예로 봐서 과거 서천군수의 장항산단이 무산됐을 때의 그 투쟁력 또 여수시장의 재선하는 과정에서의 시민 결집력, 우리가 그런 것을 본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문제도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카이스트가 대전이 아닌 인천과 손을 잡고 있고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상한 말투로 주민들을 혼란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철회는 하긴 했지만 그 철회 내용이 애매모호합니다.

말의 실수라고 했다가 또는 “말의 실수가 아니라 충북과 대전이 싸워서 안 된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러한 정치인들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서 과연 대전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당선자 시절에 인지한 사실입니다.

당선자 시절인 6월 중순에 민간에서 와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서 의견을 받았고 그때부터 나름대로는 민간과 더불어서 준비작업을 해왔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발단과 시작과 말은 지금의 정부에서 했지만 결론은 지금 정부에서 나지 않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준비하고 구상해서 나름대로 안을 만들 것이고 또 지적하신 대로 역량있는 정치인과 시민단체, 언론 같이 힘을 합해서 지역의 힘을 쌓아가야 합니다.

지역의 힘은 시장 한 사람의 힘으로 표현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서천군수가 장항산단을 위해서 어떻게 했든 간에 그것은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도 넘은 얘기가 지금까지 돌아오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또 당이 같다는 일관성이 어떤 점에서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대전시에서 시장은 한나라당이고 정치적으로 같이 가는 그런 정치권이 우리 의원님들말고 그렇게 크게 많이 계시다고 안 봅니다.

또 정당간의 세력싸움이 생기면 그 분야는 더욱더 극렬해지리라는 것은 누구나 추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이제 지역이 정치적 힘을 가지려면 정치적 힘을 가질만한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몰라도 같은 입장을 가진 선출직 정치인들이 힘을 합할 수 있는 것은 더 용이하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같은 입장에서 시 집행부와 의원님들 같이 힘을 합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다짐과 전기가 되도록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이스트와 관련해서 카이스트 확대입장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래서 용역 자체를 카이스트에 맡겼고 카이스트의 지역적인 구상을 같이 담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첨단의료복합단지와 관련된 일을 인발브(involve)시켜놓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얼마 전에 용역보고회를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그것으로 완결지을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거기에 새로운 조정과 합리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저희로서의 최적안을 만들고 단계별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갑니다.

지난해에도 지역출신의 장관을 지낸 분들 일곱 분을 모셔서 저희가 자문위원회라는 것을 꾸려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과기부장관 출신인 김시중 장관입니다.

그 주변에서 계속 외연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정섭 의원님 잘 아시는 대로 당에서 한 지역에 공약을 내놓으면서 우리 지역에서 관심있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자체를 다른 지역에 공약한 사실은 저희 지역에서 볼 때는 적절치 못하다 하는 점으로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그 당에서 약간의 입장 수정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문제를 위해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주셔서 중앙에 같이 가신다든지 아니면 인맥을 통해서 연결해 주신다든지 시민의사를 결집하는데 엇그저께도 결의대회에 앞장서주신 것처럼 계속 노력을 같이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도 큰 힘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본 의원은 대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두 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대해서 대전지역 정치인들도 결집되지 못하고 있고 또 충북 지역에서는 얼마나 호재가 되겠습니까?

‘봐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도 오송을 지지하고 있지 않느냐’ 라는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 엄중히 이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과거 전임시장들과의 차별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안사업들이 중단 내지 계획성 있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 예로 대전시 균형발전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도시철도 2호선 이것이 지난 3기, 4기 민선시장의 의지부족으로 지지부진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시중에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사실 광주는 벌써 착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도시철도 2호선의 서류가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그 판정결과 기획예산처에서 결과야 어떻든 간에 ‘경제성이 부족하다’ 하는 점으로 판정났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노선을 수정하든지 시기를 조정하든지 어떤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 다시 제출하는 그런 과정이 행정적으로 당연한 과정이겠지요.

지금은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또 제가 기억하기로는 2호선은 엑스자축이 아니고 순환선 개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대덕구에서는 대덕구 소외론을 거론하면서 대덕구 쪽으로도 지하철 노선이 와야 한다는 주문을 하고 계시고, 또 관저동 일대 서남부 쪽에서도 거론을 하시면서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는 지하철 노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정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서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일이고, 광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참 저희끼리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컨벤션센터를 구상해서 만들 때 대전은 문화관광부 계획에 이미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주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 그쪽 지역에 대한 정치적 입김이 세서 거기는 계획도 없이 예산이 주어졌고 대전은 빠지는 그런 아픔도 겪은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고려할 때 정말로 일선현장에서 시민과 대화하고 정치인으로 계시는 시의회 의원님들은 어떤 사정이 저간에 깔려있는지를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일들을 안 당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의원님들도 같이 고민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들은 먹고사는 문제, 대전경제 살리기를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꼽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대전경제가 그럭저럭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바닥입니다.

대전시정이 아마 거울에 비친 모습은 언론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언론을 통해서 대전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지 최근의 언론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간 대전 쇠락, 충남 부흥’, ‘대전 대기업 유치소홀 끝없는 추락’, ‘대전실업률 4% 전국 1위’, ‘벤처수출 충남 약진 대전 부진’, ‘대전 중소기업 지원 전국 꼴찌’, ‘군수사 효과 김칫국만 마셨다, 대전시 수천억대 전망, 실제 7개월간 92억 수주’, ‘대전 경제협의회 있으나마나, 사전준비 소홀 등 형식적으로 운영’, ‘헛도는 대전 1·2산단 재정비사업 표류 12년째, 화낼 힘도 없다’, ‘대전유통점 80% 재래시장 협력 무관심’, 오늘자입니다, ‘대전시 기업유치전략 실종, 수도권기업 이전설명회에서 용지없다 뒷집만’, ‘대전시 공사·공단 경영낙제점’ 그래서 결론은 ‘쪼들리는 살림, 쪼그라드는 대전시’입니다.

물론 이러한 경제악화는 현 시장의 책임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부터 노무현 정권의 실정 그리고 전임시장들의 인기행정,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인기행정 탓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현 시장의 경제 살리기에 대한 부족한 추진력도 큰 몫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오정섭 의원님께서서는 언론인 출신답게 언론에서 표방한 많은 자료를 흡수하시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물론 상당부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그런데 전부 다 맞다고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언론은 소위 헤드를 뽑을 때 나름대로 의도도 있고 강점도 있어서 다소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 대해서 도출된 이야기만을 뽑아 올린다면 같은 느낌일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언론에서 주장하는 면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나름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조금 성급하실 수 있다, 하지만 걱정하시는 것은 ‘경제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쓰라’하는 지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전의 경제여건이 어제 오늘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어제 오늘 애썼다고 내일모레 당장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경제입니다.

경제는 원인과 이런 것들이 상당기간 걸쳐서 표출되는 것이지요.

또 경제라고 하는 것이 환율이라든지 오일이라든지 국제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 자체가 건설경기나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크게 주어서 더 큰 경제적인 임팩트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인 영향이 크지요.

그렇지만 지역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또 당연히 지적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자세의 문제를 저희가 고쳐야 될 것이 있으면 고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지역에 웅진에너지라는 아주 최첨단 기업이 들어왔습니다.

의장님께서도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시정질문 일정을 어제 하루를 빼주셨습니다.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온 것을 대단히 의회와 시와 시민도 환영한다는 웅변적인 표현이지요.

그 기업이 대전에 올 때 구미로 갈 계산이었다는 말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것을 대전시에서 유치했고 그 과정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른 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것을 그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나름대로 자세를 갖고 열심히 합니다.

효과나, 지금 오 의원님께서 물으실 거라고 예상된 것이 몇 개 있어서 뒤에 설명드려야 될지 지금 설명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재정관계와 우리 지역의 실업률 이런 문제 그것 지금 다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이따가 별도로.

○吳丁燮 議員 이따가 순서가 또 있으니까요.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알겠습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런데 강조하시는 점은 좀더 시민들 생활이 어려우니까, 경제적 측면에 더 노력을 해달라는 따뜻한 또 따가운 채찍으로 알겠습니다.

이미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유치 또 자금유입, 유치인데 가장 필요한 것이 산업용지입니다.

산업용지에 대한 시동을 걸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오려면, 눈에 보이려면 3년 걸립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R&D특구 내에 172만평 만드는데 하여튼 상당량의 부지를 동시에 발하자고 해서 추진하고 있고, 신탄진프로젝트도 진행중에 있고, 몇 가지 지역 내에 있는 가능한 토지를 산업입지로 만들기 위해서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도 조금더 용이하리라고 봅니다.

하나의 예로 오늘 웅진에너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유형의 기업들이 기분 좋게 대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업무자세를 다시 다잡고 해서 지역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본 의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전민심이 흥흥한 데는 근본적으로 경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사실 경제 문제가 풀리면 다 잘한다고 박수 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지가 시민들이 볼 때는 부족한 것 아니냐, 정책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대덕연구개발특구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조성 등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 점을 좀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홍보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가 지금 땅이 없어서 땅을 만드는 작업을 취임해서 바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이면 아마 토지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적어도 개발계획이 확정되거나 하면 그것을 가지고 기업유치에 나서는 것입니다.

‘2009년에 이만한 땅을 줄 수 있으니까 이리 오십시오’ 또 그 전에 우리가 할 일은 그것 말고라도 기관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철도공사와 협의를 긴밀하게 하는 내용중에 인력개발원을 유치하는 것이 하나 있고, 용산에 있는 시설 일부를 대전에 유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또 최근에 연구단지 내에 있는, 원어로 돼서 이름이 조금 이상합니다만, 과학과 관련된 인력교육개발원이 우리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점으로 기업과 아울러서 어떤 기관의 유치 자체도 저희가 크게 관심 두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큰 땅이 없이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당장 용지가 있어야 합니다.

일전에 테크노밸리 내에 외국인 전용단지를 저희가 정지시키고 일반으로 분양했을 때 5 대 1이 넘었습니다.

땅이 없다는 얘가지요.

그래서 외국인 전용단지도 특구 내에 개발할 때 거기에 해도 늦지 않고 우선 급한 기업부터 접수하는 이런 형태를 취해서 그 부분이 가능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벤처기업이든 재래시장이든 자영업이든 대기업이든 관심을 갖고 좀더 시민들이 걱정 안 하시도록 배가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산업용지 조성, 기업유치 이것은 대전의 성장발전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기업을 조사해보면 어디로 갈 거냐고 물어보면 경기도나 영남권입니다.

아니면 충남, 대전에 온다는 기업이 없습니다, 용지도 없습니다.

아마 몇 년 후쯤이면 대전으로 이사오는 기업은 없고 대전을 떠나가는 기업만 생기지 말라는 법도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공약사업으로 2010년까지 신규산업용지 100만평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실천의지를 밝혀주시고, 최우선 순위를 산업용지 조성 과 기업유치에 둘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최우선이라는 말씀이, 뭐 동의합니다.

그런데 도시행정에서 분야별로 다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충남도나 도청과 다른 부분인데 도시에서는 아시는 것

처럼 행정수요가 동시다발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복지를 최우선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문화적인 측면이 약하니까 문화를 최우선으로 해달라, 경제를 최우선으로 해라, 장기적으로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해라, 교통이 급하다 해서 직접적으로 시에서 처리하는 일이 도 단위 행정기관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동시다발로 다 열심히 해야 합니다.

부서별로 국장들이나 간부들이 다 같이 자기가 하는 일이 최우선이다 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을 하도록 독려하겠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전방위로 다 열심히 잘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제는 기업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조금 다른 분야에 더 애를 쓰고 공장용지가 확보될 수 있는 것이 생기면 기업유치에 애를 쓰고 해서 동시다발로 시기적으로 맞게 지역경제를 키울 수 있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어쨌든 대전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시장이나 간부들께서 서울에 있는 대기업 본사를 유치하고, 산업용지를 조성하고, 그럼으로써 일자리 창출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바라고 했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나 산업단지유치를 별도의 팀으로 구성을 하고 연관된 일이지만 일자리 창출팀도 좀더 보강 강화해서 내년부터는 활성화시켜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에 기업이 떠나고 들어오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질문 하시겠습니까?

○吳丁燮 議員 자료를 받았습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제가 답변드릴까요, 아니면…….

○吳丁燮 議員 됐습니다, 그건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대전의 환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에 원자력사고가 일어났지만 시민안전을 담보하는 일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고 봅니다.

150만 시민이 밀집한 도심 속에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자력시설물이나 오염물질을 두고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대전은 북풍이 부는 대전도심의 북쪽에 실험용 원자로와 1만 2,563드럼의 방사능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많은 폐기물이 대전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인되어 왔습니다.

시민은 속았고 우롱당한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오해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최근의 방사능 사고 사례만 봐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2004년의 원자로 중수 누출사고, 2005년의 방사선 요오드 검출, 2006년의 실험실 화재, 2006년의 방사능 노출 사고, 그리고 금년 5월에 우라늄 시료 2.7kg 분실사고 얼마나 안전불감증에 걸렸다는 증거이겠습니까?

대도심 한복판에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고투성이 시설이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대전시가 사고 때마다 일회성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지금 저희가 받은 시정질문 항목에 없는 내용을 질문하셔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하지 못해서 흡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하신다면 지금 아는 정도만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이 우리 지역에 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거기에 핵연료주식회사도 있고 핵 관련된 시설이 우리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일 사실입니다, 안전기술원도 있고.

등등 있는데 최근 몇 번 사고가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제기됐고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장치와 더불어서 국가적인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계기를 삼아서 구상으로는 앞으로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대응하도록 하고, 방사능에 대한 방재장비를 확보하는 일도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면서 생화학인명구조차량 구입도 소방본부에서 내내 할 계획입니다.

또 한국원자력연구원 주변에 환경방사능 측정검증용역도 내년에 추진하겠습니다.

또 현장 방사능방재센터 설립도 내년에 착공해서 2009년에 원자력안전기술원 내에 설립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저희가 더 관심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다른 지역과 같이 우리 지역에도 원자력 관련된 시설이 있으니 지원을 해달라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의원님들도 힘을 보태주셨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관계법규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비해서 저희는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낸 바도 있지만 이제 새롭게 내년에는 제기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주장하거나 관심있는 것은 원자력시설과, 여기 있으니까 방재센터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관련된 의학원 이런 것들도 우리 지역에 해주어야 한다 하는 건의를 하고 있고 원자력에 대한 좀더 많은 이해를 위해서 원자력을 홍보하고 있는 원자력 교육 및 알리는 기능을 하는 기관들도 우리 지역에 유치되기를 저희가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의회나 저희도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주셔서 우리 지역의 걱정이 줄어들고 계제에 원자력의학원을 여기에 유치하도록 노력하는 이유는 우

리가 고대하고 있는 이유는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유치 여부와도 연관성이 같기 때문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점에서도 같이 힘을 합해주시기 바랍니다.

○吳丁燮 議員 사실 이 문제는 그냥 사소한 문제로 넘겨질 사안이 아닙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 후손들의 안전을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일회성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보면 지금 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한 지역이 대전의 북쪽, 사실 만의 하나 사고가 난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누가 대전이 쾌적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치권과 연계가 되어야 하겠지만 실험은 여기에서 하더라도 폐기물은 다른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섬으로 가든지, 사실 연구용 원자로의 이전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런 엄청난 위험물을 대전도심에 갖고 있다는 것이 대전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그냥 그냥 이제까지는 넘어왔지만 앞으로는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치권과 연결해서 우선 폐기물부터 다른 장소로 이전하고, 어디 섬으로 가든지 또 원자로는 실험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실험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실험해보고 저것도 실험해보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150만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아마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동의하십니까?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글쎄요, 지금 저희가 준비된 상황이 충분하지 못해서 여기에서 직접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일이라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으로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원자력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좀더 저희가 알고 배워야 할 것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원자력연구소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거기에 있는 저준위, 중준위 이런 단위의 폐기물들은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좀더 전문적인 식견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책들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앞으로 원자력연구소가 얼마나 어떠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것이 가장 적절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 주변에는 원자력연구소와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 관련된 많

은 시설들이, 안전과 관련된 시설도 우리 대전지역의 연구소 주변에 다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정리해보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다른 쪽의 시각을 가지고 그럴 우려는 없는가 하는 면도 포함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다음은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신 3,000만 그루 나무심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나무심기 사업 그 취지나 정신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심기 사업은 민선3기에도 시책으로 매년 100만 그루씩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대전시가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최우선 사업 그리고 절체절명의 과제가 나무심기 사업으로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시각입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민자를 포함해서 1,637억원 그리고 2020년까지 약 6,0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대전의 경제상황으로 볼 때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을 시민의 시각으로 조절할 필요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글썄요, 부러 의원님께서서는 시정질문 내용과 다른 것을 물으시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질문에 대해서 제출하시거나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이것을 계속 물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십시오.

일단은 말씀드리겠습니다.

○議長 金榮寬 잠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은 시민들의 궁금한 부분을 풀어주기 위해서 규정에 의거해서 사전에 집행기관에 질문요지를 통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준비해서 그런 궁금증을 해소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기존에 주었던 자료와 관계없는 질문요지가 돼서 아마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음에 서면으로 요구해 주시고 당초 집행기관에 통보했던 사항 위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그래도 말씀 주셨으니까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릴까요?

○吳丁燮 議員 그 부분은 이제까지 시장께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오신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일상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지금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평소에 하신 의견도 있고 해서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접수해서 조정해야 할 것은 조정할 계획입니다.

주로 내용이 3,00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는데 3,000만 그루가 맞냐, 틀리냐 하는 지적이 일부 있어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계획은 2020년까지 3,0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것이고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민들께 공포해서 접수돼서 시장 취임 이후에 추진하는 일입니다.

나무심기는 아시는 것처럼 계절적인 사업입니다.

봄, 가을 이 시기만 합니다.

나머지는 관리시기이지요.

그래서 그 시기에는 나무심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봄에 나무심기를 강조 안 하고 여름에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겨울에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인 일이 되다 보니까 평상적인 일도 같이 하는데 나무심기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인식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시기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3,000만 그루는 한 15년 동안 200만 그루씩 연간 심어나가는 것인데 저희가 보면서 경제력도 나아질 것이고 나무심는 필요성과 인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도심의 녹지율이 지금 10% 반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선진국이 되려면 15%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000만 그루를 2020년까지 심었을 때 우리 도심의 녹지율이 15.7%인가 15.8%가 됩니다.

그러면서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나무심기는 아시는 것처럼 탄소 배출과도 상당히 영향이 있는 것입니다.

도심의 환경, 공기 이런 부분과 상당히 밀접하기 때문에 역점을 두어서 해갑니다, 가면서 시행착오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 여기에다 이런 나무를 심었나, 왜 저기다 저런 나무를 심었는가 하는 부분의 시행착오는 저희가 달갑게 받아서 시행을 해가면서 고쳐나가겠습니다.

또 나무심기 3천만 그루 해서 대목이나 이것을 전부다 심는 그렇게 심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비율의 교목과 관목을 섞어서 심어야 오히려 조화롭고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구상을 가지고 합니다.

또 나름대로는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종합계획도 세워봤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전문가 그룹을 만들어서 자문도 받고 또 자문관제도를 하나 두어서, 전문가를 두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나무 심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심는 방법이나 위치나 이런 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저희가 접수를 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오히려 다른 도시에서 저희 나무심기운동과 관련된 사항들을 벤치마킹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심을 써주시고 시에서는 이제 내 나무 갖기 운동을 새롭게 전개합니다.

결혼기념나무 갖기, 아이들의 입학기념으로 나무를 주기 운동 이런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직접 내 나무를 갖는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도시의 환경도 좋아지고 사람들이 정도 쌓아지는 그런 운동으로 전개하고자 합니다.

○吳丁燮 議員 나무심기사업은 대전시 도시계획과 연계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吳丁燮 議員 다음은 재정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2조 4,021억원 전년대비 7.3%가 늘기는 했지만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바와 같이 지방세수는 줄고 체납세금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박 시장께서 상당히 재정적으로 불행한 시장이다, 어려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철도문제라든가 천변고속화도로, 시내버스준공영제 이러한 경직성 경비의 모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장으로서 해야 될 신규사업이라든가 가용재원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세입 한계의 극복을 위한 기본경비 인상억제와 세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지금 의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실제로 내년도에는 저희가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5%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이 전망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재정여건을 보면 2008년도 세입은 전년도 대비해서 7.3%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 통상 5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9.8%입니다.

그래서 5년간 평균 증가율보다 조금 낮습니다.

또 세입증가율은 예년 수준으로 보는데 최근에 발표된 것처럼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이 해제가 되면 거기에 따른 세수가 조금 활성화되어서 들어오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세출수요가 세입증가율을 크게 상회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존적인 어떤 경직성 경비도 있지만 최근에 복지와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복지시책을 강조하면서 매칭자금으로 하는 부분 때문에 지방재원이 거기에 많은 부분이 팔려들어가서 시뿐만 아니라 구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사항들이 감안되어서 가용재원이 적고 지적하신 것처럼 신규사업하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세입을 확충하는 방안을 만들고 지금 부과된 것이 안 거친 것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건어들여야 되고 경직성 경비나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다소는 새로운 방법으로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채나 통합기금 등을 활용해서 재정수요에 맞춰나가는 것 그런 재정운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납액 징수와 관련해서는 기존사항보다 획기적으로 인원을 보강하고 통상 체납액 300만원 이상만 시에서 관리를 해서 건어들였습니다만 구청의 인력과 이런 부분들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제도를 고쳐서 100만원 이상되는 체납액에 대해서도 시에서 직접관리를 해서 강조해서 세입을 더 올릴 계획이고 탈루·은닉세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평소보다 더 강조해서 세입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이렇게 대책을 강구해 가겠습니다.

지금 노인과 관련된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해서 441억원이 추가되는 등 해서 복지 수요가 통상 2006년부터 2007년에 22%가 올랐고, 2007년부터 2008년 것을 비교하면 19.9% 그것도 20% 정도가 막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전반적인 추세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하반경직성이 있어서 한번 올라가면 내려갈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대로 저출산에 대한 관심, 보육에 대한 관심, 노인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많이 커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재정여건들이 많이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야 될 일이라고는 인식을 합니다만 좀 속도조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요, 또 중앙부처에 대해서 사회복지비 부담액에 대해서 차등보조율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를 하고 부동산교부세나 분권교부세, 보통교부세 등 지방교부세의 확보에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자 합니다.

○吳丁燮 議員 좋은 답변을 주셨는데 민선 4기 이후에 세 번의 조직개편을 이번까지 포함해서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마다 인원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기 말인 2010년까지 인력운영방안은 어떤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저희가 인력이 늘어나는 것이 정부에서 필요한 조직을 하기 위해서 TO를 주고 늘리자는 것도 있습니다.

과거사진상규명 담당이라든지 회계계약과 보고 복식부기담당을 만든다든지 그런 요소도 있고 큰 요소는 소방부서의 신설 이런 것들과 관련되어서 인원이 늘니다.

소방부서도 지방공무원 정원에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늘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시민들 보기에는 그렇게 칭찬 받을 일은 못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중앙정부가 걱정을 듣고 있는 것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공무원이 몇 만 명이 늘었다는 것을 지적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지방도 일부 늘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도 조직진단이나 이런 것을 잘해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것은 얼른 주고 또 늘어날 여지가 있는 것은 줄어든 행정수요의 것을 옮겨서 쓰는 이런 복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노력을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공무원 수를 줄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경쟁체제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 가능한 조직이나 기능이 쇠퇴한 조직은 통폐합, 폐지하고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것만 신설해서 뭔가 경쟁시대로 돌입해야지 않느냐라는 주장입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전적으로 옳습니다.

○吳丁燮 議員 시장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경쟁체제도 도입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체제를 도입할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지금 서울시가 그런 내용들을 발표했고 울산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소위 언론상 표현으로 “철밥통을 깬다” 하는 표현들이 연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직은 어떤 방식으로 실행이 되었는지 확인은 안 됩니다만 서울시가 일부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사례를 참고를 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행정의 수요나 업무량이 줄은 데는 조정을 해서 다른 부서에 업무량을 커버를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은 전적으로 옳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세입증가를 위한 별도 대책반을 운영하는 문제도 별도 증원이 없이 현 인력을 가지고 정리해서 그 부분에 인력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례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사, 공단도 저희가 나름대로는 혁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직에 대한 인력이라든지 성과를 평가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년 정도 가면 정착이 되어서 개선사항들이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잘 챙겨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성과가 나도록 업무하는데 반영을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같은 맥락에서 공기업에 대한 경영혁신도 절실하다고 봅니다.

대전시 산하 공사, 공단에 대한 금년도, 지난해조 그러니까 2006년도 경영평가결과 무더기로 낙제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장 취임 후 그동안에 경영개선노력이 많은 노력을 꾀하여 왔다고 하지만 아직도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현시장의 전적인 책임은 아니라고 봅니다.

작년 경영성차가 있기 때문에 전임 시장과 현시장의 중간선에서 나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눈총은 따갑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은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정말로 어떻게 경영개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도 우리 경영혁신담당관실을 통해서 공사, 공기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주문했습니다.

성과위주로 이제는 임원들도 평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임원들 임기가 통상 3년입니다, 3년간 아무 조건없이 그 자리에 있겠다 하는 발상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매년 평가를 거쳐서 확인해야 될 것이고 관리하는 조직과 운영에 대해서 지속적인 평가를 거쳐서 거기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런 시동을 금년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에 준 위탁사무나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강도 있는 평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관례적으로 운영해 왔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새로운 눈으로 봐서 소위 개선시킬 사항은 개선시켜야 이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소 불만이나 또는 그런 이야기는 나올 소지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합리성을 전제로 해서 옳은 방향으로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吳丁燮 議員 지난해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엑스포과학공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경영혁신을 이루지 않으면 어려운 엑스포과학공원이라고.

1년 지난 이 시점에서 엑스포과학공원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다시 50억원이라는 적자, 지금은 최고경영자마저도 빈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어떻게 풀어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엑스포과학공원은 이미 몇 차례 의원님들의 걱정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구상도하고 좀 적지만 시민들한테 입장료도 폐지하고 울타리도 헐고, 내부동선도 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하는 자잘한 것들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관심을 썼던 것은 안 된 얘기지만 로봇랜드를 거기에다 유치함으로써 엑스포과학공원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중심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추진을 했지만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는 사안은 아직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엑스포과학공원의 방식으로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엑스포과학공원이 16만 한 17만평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3.3으로

곱해야 되니까요, 54~55㎡가 됩니다, 면적이.

이 면적을 가지고 일정한 부분은 기념공원적 성격으로 존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용도지역이나 건폐율에 대해서 과감하게 열어주고 외부자금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기업이 추구하는 성장동력과 연관된 산업을 유치하는 문제 아울러 고용을 증대시키는 문제 또 지역의 랜드마크적 성격을 갖는 구상과 사업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접수를 해서 거기에 맞춰서 엑스포과학공원부지를 새롭게 재탄생시켜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하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더 다듬어지면 그 사안을 별도로 의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丁燮 議員 산하 공기업도 마찬가지로 대전시 산하 출자, 출연기관도 방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206억원을 출자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5억원 출자한 농수산물유통센터, 109억원을 출자한 신용보증재단, 25억원을 출자한 첨단산업진흥재단, 매년 88억원씩 지원하는 체육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강해이, 방만경영, 비효율을 초래한 부분도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점검을 하기는 했지만 점검결과에 따라서 폐쇄할 곳은 폐쇄하고 키울 곳은 키우고 새롭게 재정립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예,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같은 방향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 평가하고 확인했다고 그치지 않고 매회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상응한 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吳丁燮 議員 끝으로 대통령선거 과정만큼 대전의 현안사업들이 대선공약에 포함되고 또 새로운 정권에서는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정이 역동적이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면서 신뢰받는 대전시정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의원님께서 주신 자료 중에는 실업률하고 또 기업이 떠나는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안 물어보셔서 양해하신다면 그것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 지역의 실업률이 제일 높다고 나타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온 자료를, 이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자료를 설명드리면, 우리 시는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5세 이상 인구증가율이 7대 도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가장 높은 데가 울산입니다, 울산이 1.8이고 대전이 1.7입니다.

또 취업자 증가율도 2위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취업자 증가율도 보면 울산이 4.2, 대전이 3.3, 인천이 3.1 나머지는 다 1%대 수준이고 부산은 마이너스 0.9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실업률이 타도시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실업률은 일할 의사와 경기변동에 따라 변화하는 경제활동인구 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로써 일할 의사와 능력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다만 늘어나는 인구에 대한 일자리 공급 정도는 고용률에서 잘 나타나는데 고용 정책에서는 고용률, 소위 '15세 이상 인구' 분에 '취업자' 곱하기 100입니다.

이런 보조지표를 사용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나타내는 고용률 증감추이를 볼 때 우리 시는 7대 시 중에서 울산 다음입니다.

울산이 고용률이 2.4, 대전이 1.6, 서울이 1.4 나머지는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또 2005년 이후에 꾸준히 개선되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률이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으로는 중요한 사안임을 인식합니다만 그런 고용률 등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의원님들께 한 부씩 다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사회적 일자리 중에서 55개 사업에 2만 7,043명의 신규고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크노밸리에 유치된 330개 기업이 2년 내에 가동하게 되면 약 1만 2,000명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걱정하신 것처럼 산업용지도 만들고 기업과 자본유치가 빨리 이루어져야 15세 이상의 늘어난 인구, 젊은 청년실업과 관련된 부분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생기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별도 팀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또 대전에 기업이, 떠나는 기업과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지역기업의 타지역 이전은 18개 업체고 종사원은 242명입니다.

대개 전통제조업으로 토지의 이전에 따른 이익과 주변여건과 맞지 않아서 사세확장을 해야 되는데 주변이 안 되니까 이사하는 예가 더러 있고요, 반면에 106개 기업 3,538명이 3년간 우리 지역으로 유치되어서 이전했습니다.

이것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너무 걱정만 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지역 기업유치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議長 金榮寬 오정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질문요지를 통보해 드렸습시다만 그 내용과 관계없는 그런 질문인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해주신 박성효 시장님께도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회의를 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議長 金榮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

#### 라. 김인식 의원(일괄질문)

○議長 金榮寬 그러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대통합민주신당 비례대표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를 대표할 명품 창조도시, 푸른대전 건설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호 시장님, 지역의 우수인재 양성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신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2007년 정해년을 마무리 해가는 이 시점에서 올해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하였는가?’라는 반성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우리 아이들이 평생을 살면서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키워 나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우리 어른들 모두는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할 사회적 의무와 책임이 있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다같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장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은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아갈 미래의 성장동력 자원이자, 지식기반사회의 대전광역시로 이끌어 나아갈 주역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전광역시는 미래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질 높은 먹거리를 마음껏 먹고 학교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 지원을 확대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대전광역시는 일찍이 학교급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4년 3월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의 우수 농산물 소비촉진과 안정된 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도 2004년도에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예산을 한 푼도 지원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야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전국 11개 자치단체 중 열 번째로 적은 5억원만을 책정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현재 대전광역시보다 학교급식 지원예산이 적은 지방자치단체로는 아직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뿐입니다.

이는 곧 대전광역시의 열악한 급식지원비로 인해 우리 학생들이 타시·도 학생들보다 질이 낮은 음식을 먹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는 우리 청소년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급식 식품비를 확대·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가 책정한 학교급식 식품지원비 5억원은 35개 시범학교만을 대상으로 1인 1식당 약 200원 범위 내에서 우수품질의 식품구입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으로, 연간 학생 1인당 3만 6,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충청남도 천안시의 경우에는 연간 35억원의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비를 책정하고 있어 천안시 학생 대부분이 1등급의 친환경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반면, 우리 대전의 학생들은 열악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인해 이보다 질이 낮은 2등급, 3등급의 농산물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일부 시범학교에서만 그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의 열악한 학교급식지원 현황을 볼 때 과연 대전광역시가 우리 지역의 어린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육성할 의지가 있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지역의 자라나는 어린 꿈나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우수식품 구입비를 적극 확대·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수와 경제적 차이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급식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현재 5억원의 우수농산물 지원비를 5개 자치구에 일률적으로 1억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수와 지역의 경제적 형편 및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적 정책집행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의 초·중·고등학교 학교급식비 단가는 각 학교의 형편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제적으로 생활형편이 나은 지역의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충분히 책정하여 비교적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생이 적은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식비를 낮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 질적으로 낮은 급식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이제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넘어 우리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서도 지역간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시 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균등 배분하는 지원방식을 탈피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이 많거나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학교들을 추천 받아 지원품목 및 지원액 규모 등을 심의하여 지역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 효과적인 학교급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하여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의 대전광역시 분담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는 내년도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로 22억 3,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대전광역시는 11억 1,000만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각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운용상태를 감안해 볼 때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를 어떻게 분담하려 할지 의문 시 됩니다.

일부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대전광역시가 학교급식 식품지원비를 50%씩 분담시킬 경우에 급식지원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열악한 자치구 재정을 감안하여, 학교급식 식품지원비의 대전광역시 분담비율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 50 : 50의 분담비율보다 상향조정하여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의 분담비율을 인하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는 양질의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지역 내 친환경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또는 인근 시·군으로부터 우수농산물을 싼값에 구입하여 관내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전광역시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분담비율 상향조정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체계적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2004년 3월 제정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교육감으로부터 학교급식 지원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대전광역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교급식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조속히 제정·시행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7월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시장 소속 하의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 및 기타 현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2007년 3월 「대전광역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행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급식지원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동 조례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아직까지도 조례 제정안을 의회에 상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헌법」 제31조제3항에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에서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모든 국민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면서 국가가 교육재정을 부담하여 국민의 교육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의무교육 기간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합니다.

이러한 취지 하에서 초등학교는 이미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의무교육과정인 중학교는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가 폐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헌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데, 실제로 전북지역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거부한 학부모가 4,000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경기도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전북 장수지역의 학부모들은 2007년 3/4분기 학교운영지원비를 지난 9월에 반환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학부모들은 부족한 교육재정과 학교예산 타령에 의무교육기관인 중학교에 대해서도 당연히 학교운영지원비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는 약 683억원으로, 2007년도에만 약 134억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였으며, 이러한 징수금액은 지난 2002년 이후 매년 10억원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학생 1인당 중학교 평균 학교운영지원비는 2002년에 16만 7,000원이었던 것이 매년 3.78%씩 증가하여 2007년 올해에는 학생 1인당 20만 5,000원씩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학부모가 학교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의 복리를 증진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고자 최소한도의 교육비를 부담해 온 것으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능력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 지역실정, 수업료 변동률 및 학교의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지역별 교장단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이렇게 징수된 학교운영지원비를 교직원 인건비, 학교 회계직원 인건비, 기타 교수학습활동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음을 볼 때 그 사용용도에 문제가 있으며, 아울러 징수금액이 지역 교장단협의회에서 결정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율적인 결정사항이라기보다는 강제징수 성격이 강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무상교육차원에서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무작정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할 경우에 대전광역시 중학교 전체 세입예산의 12.4%에 해당하는 130여 억원의 재원이 부족하게 되며, 그에 따른 재원마련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는 국가가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방교육청에 지원하는 형태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 또는 지방교육청의 재원마련 방안들이 마련된 이후에 연차적으로 폐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의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요구와 건전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야 합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운영지원비 문제를 ‘국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 ‘법률로써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겨 중앙정부에 ‘떠넘기기’ 식의 무책임한 교육행정을 펼치기보다는, 학교운영지원비가 지닌 불합리한 점들에 대한 개선요구를 교육인적자원부에 적극 건의하는 한편, 대전광역시교육청 차원에서도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적극 기울여서 중학교의 무상교육 실현을 하루 빨리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율적인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방식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학교운영지원비 징수방식이 지역별 교장단협의회에서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또 형식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는 관행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심의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지원비를 자율적으로 납부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 교육감께서는 어떤 견해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역의 인적자원이 지역과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어른들 모두가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신들의 꿈과 이상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깨닫는 기회와 장이 되기를 기대하며,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김인식 의원 시정질문서  
.....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대전광역시장, 교육감)

(15시 55분)

○議長 金榮寬 그러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먼저 박성호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을 같이 보여주신 데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시장인 저도 지방행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절감하고 있고 또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관련된 문제 아울러서 우리 농촌과 관련된 문제인 학교급식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와 관련된 관심을 통해서 저희가 하는 시책은 학교를 지역사회의 중심 센터로 만들어가겠다 하는 저희 캐치프레이즈 속에서 나타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7개 사업에 93억원을 지출하고 있고, 86개 학교가 나름대로는 혜택을 보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 담장을 없애서 공원으로 만들고, 학교 교정을 체육시설을 보완함으로써 학생과 주민이 같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남는 교실에 대해 지원을 통해서 학생과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것이 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체육시설을 지원하는 것이 30억원 또 열린교정 푸른숲 만드

는 운동이 32억원 또 도서관인 꿈돌이 공부방을 지원하는 것이 8억원, 배움터지킴이라고 해서 학교에 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교육청과 협력해서 하는 사업에 1억 5,000만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에 20억원, 평생교육프로그램지원 등에서 다양한 시책을 학교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발전, 교육발전 4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2010년까지 7개 분야 40개 사업에 1,427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7년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규모도 2,136억원으로 작년 보다는 217억원이 증가하였고,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교육청과 교육정책협의회 등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관심과 예산지원을 확대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제기하신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2007년에는 시범학교 35개 교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1억원씩 5억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자치단체 중에서 열 번째 저희가 규모인 5억원을 썼습니다만 서울과 대구는 아직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절대액을 비교해보면 저희가 여섯 번째입니다.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다음으로 저희들이 시비투자가 많습니다.

도의 경우는 학교급식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큰 것은 관내 농가의 지원이라는 개념도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도는 도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인 시·군에서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자료를 통해서 이해합니다.

따라서 시는 내년에는 시비를 대폭 증액해서 초등학교 급식인원의 50%에 해당하는 6만 2,000명에 대해서 22억 3,200만원, 물론 이 안에는 시비가 50%, 구비 50%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도 뒤에 말씀이 게실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뒤에 말씀드리고, 계획만 말씀을 드렸고 또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구 간에 어떤 것을 나눌 때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특수사항들을 고려해서 어쨌든 합리적인 기준이 교육청과 각 구와 합의가 돼서 정리가 된다면 그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차등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지원기준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련이 되면 그렇게 실행하는 것이 옳다는 데 공감을 표합니다.

또 시의 급식비 분담비율 상향조정 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통상 저희는 시하고 5 대 5로 하고 있는데,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가 어디를 봐도 전부다 더 많이 부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의 사무로 성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5 대 5로 지금 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는 어렵다고 합니다.

도의 경우는 3 대 7로, 광역단체가 3, 기초가 7의 부담비율을 갖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른 경우보다도 시가 5 대 5의 비율로 한다는 것은 다른 관례로 볼 때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각 구에 업무추진이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점을 저희는 지적하고 싶고요.

부득이 차등지원이나 이런 것과 관련돼도 어떤 특정 구가 지극히 어려운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그것은 특정교부금 등 다른 재원으로 별도로 고려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업무의 성격상 또 다른 지역의 관례상 볼 때 기초자치단체가 적어도 50% 이상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고 또한 그 업무의 특성에 맞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급식비식품지원심의위원회가 빨리 안 된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한 게 2007년이 처음이 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대로 서둘러서 관련 법규가 개정돼서 이런 심의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김인식 의원님께서 학교급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호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教育監 金信鎬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땀땀한 의정활동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전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아끼시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지난 11월 27일 2007년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를 성공리에 마쳤으며, 올해에도 알찬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와 관련하여 평소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무상 의무교육 취지에 따라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는 원칙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 의원님과 뜻을 같이 합니다.

그러나 무상 의무교육이라 할지라도 국가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법률로 정한 경우에는 인정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들 중에서 일본의 사친회 제도나 미국과 영국의 자진 협찬회비를 명목으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사례를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하는 것은 부족한 학교운영비를 보전하여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학교운영에 참여하여 재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는 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2002년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 과정에서도 정부차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학교운영지원비를 일시에 폐지할 경우 학교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분분해서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다면 초등학교의 경우에도 의무교육은 1950년대에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단위의 육성회비 폐지는 국가의 재정형편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1994년도에 완전히 폐지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원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문제에 대하여 다각도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온전한 중학교 무상교육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을 주문하신 데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의존도가 95% 이상을 차지하는 우리 교육청의 재정구조상 자구노력에 의한 교육재정 확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의원님의 당부 말씀에 적극 부응하여 효율적 예산투자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추구하면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확대를 촉구하고 다양한 재정확보 방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비 징수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과 심의를 거쳐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고,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펼쳐나가겠습니다.

김인식 의원님의 교육적 해안을 존경하면서 시의적절한 지적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영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와 금번 시정질문의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육청에 주신 주옥같은 충고와 고견에 대하여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대전교육 전반에 대하여 걱정해 주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대안은 2008년도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모든 교육가족에게 신뢰와 만족을 주는 대전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촛불은 낮보다 밤에 더욱 빛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대전 시민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고 대변하시는 의원님들의 정해년 의정활동은 그래서 더욱 아름답고 빛나는 촛불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대전교육에 대한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먼저 오정섭 의원님 답변내용 중에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吳丁燮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다음 김인식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

#### .보충질문(김인식) 및 답변(대전광역시장)

(16시 10분)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議員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소상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한 가지를 답변해 주시지 않았습니니다.

다섯 번째로 질문한 대전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榮寬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서로 박성호 시장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지금 답변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朴城孝 김인식 의원님께서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라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되시겠습니까?

(○金仁植 議員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議長 金榮寬 박성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 2.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전병배 의원 외 11인 발의)

(16시 13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전병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炳培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전병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이 공동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정부가 지난 2007년 6월 자기부상열차 실용화 시범 노선사업을 선정하면서 인천을 결정한 데 이어 또다시 로봇랜드조성 예비사업자로 인천과 경상남도 마산을 선정함으로써 우리 시가 대형 국책사업 유치에 잇달아 실패하여 대전시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첨단의료복합단지사업은 2008년부터 2037년까지 5조 6,000억원의 예산 투입과 82조 2,000억원의 생산증가, 38만 2,000명의 고용창출과 의료산업의 확산 등 천문학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책사업 중 마지막 희망인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반드시 대전으로 유치하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국책사업의 유치가 성사되면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는 획기적으로 변모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는 대전광역시가 명실상부한 차세대 선진 한국의 성장동력을 수행할 수 있도록 150만 대전시민과 더불어 차질없는 유치전략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구성인원은 7명으로 하며, 특위활동은 위원 선임 시부터 유치 확정 시까지로 정하고 효율적인 특위활동을 위하여 폐회기간에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여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첨단과학기술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대전의 미래와도 직결될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전병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작금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 실패를 더 이상은 거듭할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15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주도면밀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유치 확정 시까지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에 대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추진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오늘부터 유치 확정 시까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전병배 의원님, 김재경 의원님, 박수범 의원님, 광영교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김학원 의원님, 박희진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유치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 4.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 5.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시 19분)

○議長 金榮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광영교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自治委員長代理 郭泳敎 행정자치위원회 광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7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

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철건설본부의 기능 쇠퇴에 따른 기구 축소 등 행정환경 변화에 맞추어 업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일부 기구의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시행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보강하거나 재배치하는 등 행정수요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2월 준공예정인 대전컨벤션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으나 센터의 장비, 집기 등 부대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근거가 없어 이를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며, 의회의 감시기능을 강화코자 일부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 내용을 제출토록 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金榮寬 광영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컨벤션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의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6시 24분)

○議長 金榮寬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 14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 주신 박성호 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칩니다.

제3차 본회의는 2008년도 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 ○出席議員數 18인

김남욱	오영세	김영관	전병배
김태훈	김재경	곽영교	김학원
조신행	오정섭	송재용	이상태
박희진	박수범	심준홍	이정희
김인식	권형례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대전광역시장	박성호
행정부시장	박찬우
정무부시장	양홍규
기획관리실장	송석두
경제과학국장	이진옥
투자통상본부장	김창환
자치행정국장	조찬호
문화체육국장	정하윤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교통국장	차준일
도시건설방재국장	박월훈
소방본부장	신현철
공보관	김낙현
감사관	정경자
정책프로젝트팀장	양승찬
기획관	권혁돈
공무원교육원장	박현오
상수도사업본부장	안규상
건설관리본부장	이상용
지하철건설본부장	김의수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홍목
농업기술센터소장	백선만

##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教育廳)

교육감	김신호
교육국장	강진수
기획관리국장	이치범

## ○尖端醫療複合團地留置特別委員會 委員選任

성명	정당	성명	정당
전병배	한나라당	이정희	한나라당
김재경	한나라당	김학원	한나라당
박수범	한나라당	박희진	한나라당
곽영교	한나라당		